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| <b>보도해명자료</b>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  | 2020. 6. 30(화) / 총 3매(본문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<br>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이명섭, 서기관 박진홍, 사무관 유지만</li> <li>• ☎ (044) 201-3321</li> </ul> |
| 보 도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김현미 장관이 ‘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’ 고 언급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
<보도내용('20.6.30, 연합뉴스, 조선일보 등)>

- ◆ 김현미 “부동산정책 다 잘 작동하고 있다”
- ◆ 김현미 “부동산 정책 22번째 아닌 4번째, 잘 작동 중”

- ☐ 금일 예결위 질의답변 중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 “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”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☐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“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”
  - “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”입니다.
- ☐ 상기 답변의 취지는 답변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간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,
  - 아직 12.16대책 및 6.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.

- 금번 6.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(6.19일),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(6.23일)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,
-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, 연 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.
- 또한,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 부과와
- 12.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,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 정책과 유지만 사무관(☎ 044-201-33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원 : 그러면 네 번(의 대책)을 냈으면 세 번은 실패한 것이네요? 앞으로....

장 관 : 아닙니다.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

의 원 : 잘 가고 있습니까?

장 관 :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

의 원 :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?

장 관 :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의 원 : 지금 아직도 평가가 이릅니까? 집값이 안 오른 건가요?

장 관 : 예, 12·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의 원 : 여러 번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관련해서 후속 대책은 아직은, 후속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된 게 많지요?

장 관 : 예, 많습니다.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서도 법인들의 세제를 강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.